

일본의 오키나와 그리고 오키나와의 일본*



최인택
(동아대 일본학과 교수)
(itchoi@dau.ac.kr)



1. 머리말

역사적으로 볼 때, 오키나와가 일본사회의 일원이 되어가는 프로세스는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다. 오키나와 이외에 일본사회라는 범주 바깥에서 독자적인 국가를 만들어 왔던 지역이 과연 있을까? 복잡하고 긴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일본사회로 편성되어 간 지역이 달리 있을까? 그리고 또한 주민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본사회 바깥으로 내몰렸고, 주민들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일본사회로 복귀한 지역이 달리 또 어디에 있을까? (高良倉吉 1986, 12)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위의 글은 오키나와출신 연구자로서 오키나와 역사에 대해 남다른 시각과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유구왕국에서 현대 오키나와에 이르는 역사적 흐름에 대해 역동성을 부여해 온 타카라 쿠라요시가 제기한 현 오키나와에 대한 역사적 자리매김이다. 간략히 언급을 더하자면 오키나와 지역은 1372년 중국의 명과 책봉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동아시아의 일원으로 등장하게 된다. 1429년에는 삼산(三山)통일을 기점으로 琉球왕조시대를 맞이하였으나, 1609년 일본의 사츠마(薩摩)가 유구를 무력으로 침공하여 식민지적 지배를 받아 왔으며, 1872년 새롭게 탄생한 일본의 명치정부에 의해 유구번(琉球藩)으로 편입되고, 1879년 우여곡절 끝에 '유구처분'에 의해 오키나와현이 설치되면서 명실상부한 일본의 새로운 영토로 편입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2차 대전에서 패한 일본은 오키나와지역을 미군정하에 내주게 된다. 즉, 왕조국가에서 사츠마에 의한 식민지적 지배,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일본으로 편입된 오키나와는 1972년에 일본본토복귀라는 수순을 거치기까지 또 다시 이민족 지배아래 놓이게 되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적이 내포하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일본사회 혹은 일본인들이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일본은 단일민족, 단일문화라는 균질성과 동질성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암암리에 깨우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단일민족국가신화'는 명치기를 통하여 '萬歲一系'의 嫡子인 천황이 다스리는 '神의 나라 일본'이라는 허구 안에서 각성시켜온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적 산물들을 생성시켜 온 집단 혹은 이민족들을 '同化'라는 억압적인 기제를 통하여 균질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동화메커니즘으로부터 이탈하거나 부합하려고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排除'라는 힘의 역학을 이용하여 차별하게 하는 구조적 특성이 내재될 수밖에 없다. 즉, 안으로의 동화와 바깥으로의 배제라는 '이중의 역학 장치'를 통하여 강고한 단일국가관을 형성시키고, 일본 내의 북방민족인 아이누, 그리고 재일조선, 한국인들과 더불어 오키나와인들에 대한 억압 혹은 차별의 기제가 내포되어 있다. 이는 또한 '日琉同祖論'²⁾이라는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근간으로 하여 오키나와 지역을 일본의 새로운 영토로 편입시키면서 발생할 다중 다양한 저항들을 희석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하 본문에서는 1609년 이후, 사츠마에 의한 유구지배기의 일본과 유구, 그리고 명치기 폐번치현(廢藩置縣)을 거쳐 유구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일본과 琉球藩 및 일본의 새로

1) 최인택, 2002. "일본과 오키나와-중앙과 변경의 논리" 『일본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책사랑, 176.
2)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일류동조론'에는 사츠마의 식민지적 지배아래 불가피하게 내세운 오키나와 측의 언설과 일본 측의 지식인들에 의한 학문적 뒷받침을 통하여 전개된 언설로 나눌 수가 있다. 후자의 경우,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면서 내세운 '日鮮同祖論'과 같은 맥락으로 식민지 지배의 부당함을 은폐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논리로 이용되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인택, 2002. "일본과 오키나와-중앙과 변경의 논리" 『일본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책사랑, 178-184를 참조하기 바란다.

운 영토로서의 오키나와, 그리고 1945년 일본의 패전에 따른 오키나와의 미군군정(군사적 통치)과 일본본토 복귀 직후의 오키나와에 대해 양자 사이에서 생성된 관계성에 대해 서술하기로 한다.

2. 유구왕조와 사츠마의 식민지적 지배

14세기에 들어 유구는 오키나와본도(本島)에 군웅할거 하고 있던 '아지(按司)라 불리는 지역首長들을 중심으로 세 지역으로 재편된 '산잔(三山)' 시대가 전개되고 있었다. 그 중 본도의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던 추잔(中山), 그리고 오키나와 본도의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호쿠잔(北山)과 섬의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난잔(南山)이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 중 추잔의 왕을 칭했던 '삿도(察度)'에게 새로이 탄생한 중국의 명이 1372년 楊載를 단장으로 한 사절단을 보내어 入貢을 권하게 되고 이에 응하면서 조공 관계를 맺게 된다. 洪武帝가 사절단을 파견하면서 보낸 詔書에서 나라이름을 '大明'으로 한 것과 연호를 '洪武'로 하였으며,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入貢하게 되었다는 설명과 함께 "琉球는 중국의 동남쪽 먼 바다 너머에 위치하여 아직 이러한 일들을 잘 모르고 있다. 따라서 특별히 使者를 파견하여 알리니 잘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明實錄』).

여기에서 琉球라는 문자기록이 처음으로 『明實錄』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후, 아마미(奄美), 오키나와 본도 및 사키시마(先島: 오키나와 본도 이남의 미야코(宮古)諸島, 야에야마(八重山)諸島의 총칭)지역의 총칭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³⁾. 이는 또한 유구지역이 동북아 地域史에 정식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명과의 책봉관계는 조공무역을 통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은 물론 당대 중국의 선진적인 문물제도가 도입되고, 유학생의 파견, 중국으로부터 건너온 歸化인들의 유구 정착 등 외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임으로서 유구의 통일왕조체제를 싹틔우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당시의 명은 進貢船에 의한 무역 이외의 해외무역을 일절 금하고 중국인들의 해외무역을 금지하는 일종의 쇄국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은 중국의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음으로서 가능하게 되는 시스템이었다⁴⁾. 이후, 나머지 호쿠잔과 난잔도 명과의 책봉관계를 맺게 되었지만, 1429년경에는 본도를 중심으로 나뉘어 있던 세 세력권이 난잔을 중심으로 통일되어 통일왕조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1500년에는 야에야마 지역에서 일어난 오야케 아카하치(オヤケ・アカハチ)의 난을 평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중앙집권적 유구왕조체제

가 확립되었다.

특히 이 시기의 유구는 중국과의 책봉체제 아래 조공무역을 중심으로 하여 당시의 조선, 일본과는 물론 동남아시아에 걸치는 광대한 무역루트의 중계지가 되었다⁵⁾. 남쪽으로는 삼(태국), 스마트라, 말라카, 자바 베트남 등과도 교역이 이루어져 14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 유구는 대교역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삼각무역은 국왕의 직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익의 모든 것은 왕실의 재정에 충당되었다⁶⁾. 이처럼 유구는 자원이 빈곤한 자그마한 도서사회였지만, 중국해를 중심으로 하여 남방에 이르는 광활한 무역루트의 중계점에 위치하여 삼각무역을 통한 막대한 이득을 거둘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지역이었다. 이러한 경제적, 지정학적 기반이 결국은 사츠마번의 유구침략의 복선에 깔려 있는 핵심적인 요소였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일본본토에서는 오닌의 난(應仁の亂)⁷⁾을 계기로 큐슈(九州)지역에서 세력을 넓히고 있던 사츠마는 시마즈(島津)씨의 도항증명서가 없는 상인들에 대한 점검을 촉구하는 등, 유구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었다⁸⁾. 예를 들어 1471년 아시카가막부는 사카이(堺: 지금의 오사카일대)상인들이 유구와의 자유로운 무역을 통제할 목적으로 사츠마의 시마즈씨에게 유구에 대한 도항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였다⁹⁾. 그러나 실제로는 사카이상인들 뿐만 아니라, 하카타(博多)상인, 시마즈領內의 상인들까지도 시마즈씨의 눈을 피해 여전히 유구와 교역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에 1570년대 이르러 시마즈씨는 유구에 대해 더 더욱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게 되었지만, 유구의 입장에서는 중개무역을 통한 경제적 기반을 왕조체제의 근간으로 삼고 있었으므로 자유로운 상선의 왕래는 무엇보다 중요하였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¹⁰⁾. 결과적으로 사츠마와 유구 사이에는 여러 차례 도항권으로 인해 빚어지는 갈등이 내재되어 있었고 사츠마의 유구침략의 간접적인 명목 쌓기에 遠因을 제공하게 되었다.

또 다른 한편, 피비린내 나는 전국시대를 마무리하고 천하통일을 꿈꾸는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등 무장들이 등장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봉건국가체제인 幕藩체제를 진전시키는 시기, 그 여파

5) 高良倉吉, 1987. 『琉球王國の構造』 吉川弘文館, 24-25.

6) 宮城榮昌, 1968. 『沖繩の歴史』NHKブックス80, 日本放送出版協會, 61-62.

7) 무로마치(室町)시대인 1467년부터 1477년에 이르는 막부후계자 문제로 촉발된 내란. 약 11년간에 걸친 전란이 이어지고 이로 인해 무로마치막부는 급격히 쇠퇴하게 되며 전국의 유력부사들을 중심으로 이합집산, 하극상 풍조가 만연하는 戰國시대로 돌입하게 된다.

8) 上原兼善, 1992. "琉球王國の歴史・第一・第二尚氏の成立と展開", 海と列島の文化第6巻『琉球弧の世界』小學館, 195-264.

9) 더욱이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1441년 아시카가막부(足利幕府)의 장군적 계승을 둘러싸고 형제간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사츠마의 시마즈타다쿠니(島津忠國)가 막부 측의 명령을 받아 반란을 진압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다. 이에 대한 은공으로 막부의 아시카가 요시노리(足利義教)는 실질적인 지배권도 없는 유구를 은상으로 수여하게 되고, 이는 나중에 사츠마가 유구를 침략하게 되는 명목을 제공하게 된다(宮城, 1968, 86).

10) 上原兼善, 1992. "琉球王國の歴史・第一・第二尚氏の成立と展開", 海と列島の文化第6巻『琉球弧の世界』小學館, 224.

3) 高良倉吉, 1993. 『琉球王國』岩波新書, 46.

4) 比嘉實, 1991. 『古琉球の思想』沖繩タイムズ, 217.

는 유구에게까지 과급된다. 특히, 주군 오다 노부나가가가 이루지 못한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룬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유구에 대한 入貢을 여러 차례에 걸쳐 시마즈씨에게 명하였으나 유구 측에서는 대단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토요토미정권에 복속할 의사가 없었다. 그러던 중 토요토미에 의한 임진왜란에 즈음하여 일본 전국의 藩主들에게 총동원령이 내려지고, 시마즈씨를 통하여 유구 측에게도 가담할 것을 명한다. 이에 사츠마 측이 부담할 군역 1만 5천명의 약 반에 해당하는 군역 7천명 분의 군량미 10개월분과 각종 전쟁지원 분담금을 유구에 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쟁준비사실을 명이나 조선에 누설하지 말 것도 명하였다¹¹⁾. 독자적인 왕조국가이면서 명과는 책봉관계에 있었으며, 같은 책봉국가였던 조선과는 선린우호관계에 있었던 유구로서는 어이없는 요구이었기에 처음에는 무시하였지만, 후환을 두려워한 유구왕부는 사츠마의 요구분의 약 반에 해당하는 부분만 부담기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국가미비라는 명분으로 응하지 않았다¹²⁾. 이 점이 결국 1609년 사츠마의 유구침략의 近因이 되었고, 이후 유구는 사츠마의 식민지적 지배를 거쳐 서서히 일본화의 길을 걷게 된다.

1598년 8월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으로 한 동안 유구는 평온한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토요토미의 사후 1600년 세키가하라(關が原) 내전을 거쳐 승리를 손에 쥐 토쿠가와와 이에야스가 1603년 정이대장군(征夷大將軍)에 올라 에도막부가 성립되고 幕藩體制가 전개되자, 토쿠가와와의 승낙을 얻은 사츠마가 1609년 무력으로 유구를 침공한다. 같은 해 3월 사츠마는 100여척의 병선에 3천여 명의 군사를 보내 4, 5일 만에 유구를 점령해 버린다. 침략의 명목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츠마는 예로부터 시마즈씨에 속하는 것이었지만 오래 동안 소원해 저 있었고, 그 간 책봉국으로서의 예를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침략 때에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누차 시정을 촉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유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명분이었다. 사츠마 내적으로는 1592년 이후 지속적으론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 엄청난 군비를 충당해 온 결과 藩의 경제적 기반은 거의 파탄 상태였고, 임진왜란으로 인해 대명무역조차도 단절된 상황에서 유구는 더할 나위 없는 먹잇감이었다.

막번체제 아래 새로운 영지확대가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명과 책봉관계를 맺고 있는 유구를 차지함으로써 경제적 수탈은 물론 단절된 대명관계를 수복하고자 하는 막부 내에서의 사츠마의 위상정립이라는 정치적 이해관계와도 맞물려 있었다. 무력으로 유구를 진압한 사츠마는 오키나와 본도 이남의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토쿠노시마(徳之島), 기카이시마(喜界島), 오키노에라부지마(沖永良部島), 요론토(與論島)를 유구로부터 분리하여 사츠마

직할령으로 하고 나머지 유구지역에서 토지조사에 해당하는 켄치(檢知)를 실시하고 조세 부담과 관련된 稅制를 1611년 전격적으로 실시한 것에서도 경제적 수탈목적은 명확해 진다. 뿐만 아니라 유구의 왕자는 인질로 사츠마에 억류되고, 유구왕조의 정치, 외교상의 모든 권한은 사츠마의 관리 아래 놓이게 된다.

한편, 대명무역에 안달이 나 있던 막부 측은 사츠마에게 명하여 하루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유구를 이용하려 하였으나, 유구왕부에서는 사츠마침공으로 패닉상태에 빠진 상황 아래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고 사츠마의 유구침공은 오히려 명나라를 자극하여 1612년부터는 2년에 한 번이었던 進貢간격이 10년에 한 번으로 줄게 되었다. 경색국면을 맞이하고 있던 유구와 명의 관계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은 1621년 당시의 유구왕 尙寧의 죽음으로 뒤를 잇게 된 尙豊의 책봉에 즈음하여 이루어졌다.

유구왕의 교체에 따라 명에 使者를 파견하여 종래의 2년에 한 번 진공으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5년에 한 번으로 완화되었고 양국 간에 사절파견도 자주 이루어지게 되었다¹³⁾. 즉, 중국 측의 유구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완화되었던 것이다. 이에 유구를 통한 대명무역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던 사츠마 측에서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구에 대한 지배정책에 획기적인 전환을 모색한다.

즉, 유구인들에게 일본식의 이름을 사용하게 한다든지, 일본식 복장을 하는 것을 금하여 이전의 독립왕조국가인 것처럼 연출시켜 명과의 관계를 이전의 형태로 유지, 계승시킨다는 전략이다. 명으로부터 사신이 도착하면, 사츠마의 관리들은 시골로 피신시켰고, 일본적인 색채들을 세세하게 감추는 등 기만술수들을 동원하여 사츠마지배를 감추기에 급급했다. 이에 따라 왕조에 대해서는 재판권, 제사권 등의 일부를 이양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자율성을 보장해 주었다.

하지만 왕위계승이나, 핵심적인 정책, 외교, 조세수입 등에 관해서는 사츠마의 엄격한 관리 아래 두었고, 실질적으로는 王府를 앞세운 간접통치의 형식으로 유구를 지배하였다. 이 점이 바로 유구에 대한 사츠마의 '식민지적 지배'를 관통시킨 원리였다. 즉, 사츠마가 유구를 무력으로 침공하였지만 사츠마의 새로운 영지로서 전면적인 편입을 단행하지 않고¹⁴⁾ 왕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유구왕국 내부의 治理를 용이하게 하고 대외적으로는 명과의 조공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이득은 물론 막번체제 아래 사츠마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절묘한 지배체제였다. 이러한 체제에 대해 앞서 언급한 타카라(高良)는 "사츠마 및 장군권력(에도막부:인용자 주)에 종속하는 왕국인 동시에 여전히 왕국체제를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책봉, 진공관계를 유지하는 독립적인 존재-이것을 가리켜 근년의 역사가

11) 그러나 유구는 이 사실을 명나라에 통보하였고, 이 부분 역시 사츠마의 유구침략 명분에 이용되었다(上原兼善, 1992, 『琉球王朝の歴史・第一・第二尙氏の成立と展開』, 海と列島の文化第6巻『琉球弧の世界』, 小學館, 230)

12) 上原兼善, 1992, 『琉球王朝の歴史・第一・第二尙氏の成立と展開』, 海と列島の文化第6巻『琉球弧の世界』, 小學館, 230.

13) 上原兼善, 1992, 『琉球王朝の歴史・第一・第二尙氏の成立と展開』, 海と列島の文化第6巻『琉球弧の世界』, 小學館, 239.

14) 물론 에도막부의 관리 아래에 있었던 사츠마 또한 막부의 허가 없이 영지편입이 불가능 하였고, 막부 또한 사츠마를 견제하기 위해 전면적인 편입은 원치 않았을 것이다.

들은 '幕藩制국가 안의 異國' 으로 표현한다. 사츠마 침공 후, 이 '幕藩制국가 안의 異國' 으로서 추이되어 온 시대가 근세유구¹⁵⁾ 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지배/복속 관계 아래 가장 혹독한 시련을 강요받은 것은 유구의 백성들이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백성들은 유구왕부의 지배체제 유지를 위한 경제적 부담 위에 사츠마에 바칠 무거운 세금부담까지 떠맡아 이중고에 시달렸다. 특히, 오키나와 본도 이남의 미야코군도와 야에야마군도(사키시마 지역)의 백성들에게는 오키나와 본도에는 없는 '닌또제(人頭稅)'¹⁶⁾를 부과하여 쌀 뿐만이 아니라 직물류의 상납까지 부과하여 엄청난 삼중고에 시달렸다. 사츠마는 유구를, 유구의 지배자들은 백성들을, 오키나와 본도는 사키시마지역을 수탈하는 '중층적' 지배구조 아래 유구는 명목상으로는 중국과의 책봉관계에 실질적인 면에선 일본의 지배를 받는다는 '이중성'의 역사가 1609년 사츠마의 침략 이래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 이중성의 역사를 파헤쳐 보면 궁극적으로는 일본 측의 형편에 따라, 혹은 사츠마의 이해관계에 따라 유구의 위치는 가변적(?)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일본본토 측의 '형편주의' 혹은 '일본본토 국익우선주의'¹⁷⁾가 그 본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3. 폐번치현(廢藩置縣)과 유구처분

1868년 명치유신을 통하여 왕정복고가 단행되고, 약 260여 년간에 걸친 막번체제는 해체되었으며 1871년 8월에는 지금까지의 번을 폐하고 현을 설치하는 폐번치현이 단행되었다. 이로서 사츠마번은 카고시마현(鹿兒島縣)으로 변경되고 그 지배 아래 있던 유구는 일단 카고시마현의 관할 아래에 놓이게 된다. 그때까지 일본본토에서 일어나고 있던 커다란 변화가 자신들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던 유구의 위정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얻게 되고서도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즉, 1)새로운 정부가 유구를 直轄領으로 하려고 한다면 가능한 한 종래대로 사츠마의 附庸國으로 남을 것을 희망하고, 2)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츠마의 지휘에 따라 朝廷에 예를 다할 것이며 3)종래의 에도막부와 의 관계에 준하는 연두사절단 및 임시사절단을 상경시키는 형태로 유지할 것이며, 4)새로운 정부에 의한 토지조사 등에서 혹시 사츠마가 감추고 있던 것이 새로이 드러날 경우를 대비해 사츠마 측과 미리 입을 맞추어 놓을 것, 5)혹시 새로운 정부가 원래 유구 땅이었지만 사츠마로 할양되었던 오키나와 본도 이남지역을 신정부의 직속으로 할 경우, 그 실상을 이

야기 하고 되돌려 받기로 한다고 결정하였다¹⁸⁾. 당시의 혁명적인 정세를 감안하지 못한 지극히 안이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인식수준이었다.

그러나 1872년 유구가 카고시마현의 관할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점을 정식으로 전달하기 위해 정부 측 인사가 파견되었고 그 실상을 전해들은 왕부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즉, 봉건체제를 청산하고 서구열강과의 경쟁을 위해 이루어진 명치유신이 갖는 근대적인 변화의 의미와 서양각국의 세력이 청나라에 침입하는 등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유구는 일본으로 귀속될 것이라는 암시를 포함한 내용이었다. 물론 이 시점까지는 비록 사츠마번의 식민지적 지배를 받고 있었고, 폐번치현의 결과 사츠마번은 카고시마현이 되었고, 유구는 카고시마현의 관할아래에 두는 것으로 결정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청나라와 進貢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사츠마의 식민지적 지배를 받고 있는 兩屬상태의 유구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였다.

1872년 명치정부로부터 慶賀使의 上京을 명받은 유구 측에서는 왕자를 正使로 하는 경하사를 보내게 된다. 이들을 맞이한 명치천황은 '尙泰(당시의 유구왕: 인용자 주)를 유구번왕(琉球藩王)으로 봉하고,華族으로 삼는다'는 召勅을 명한다¹⁹⁾. 즉, 이미 이루어졌던 폐번치현이라는 명치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결정사항에서도 청과 사츠마의 양속관계에 있던 유구는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고 '유구번왕'이라는 애매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이후에 전개될 유구처분으로 가는 길목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여기에 더해 유구의 귀속을 둘러싸고 청과의 골치 아픈 교섭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1871년 유구본도 나하(那覇)를 떠나 미야코지마(宮古島)로 향하던 배가 태풍에 휘말려 대만에 표착하게 되는데, 배에 타고 있던 69명 중 54명의 유구인들이 대만원주민들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 사실이 1873년 귀국한 생존자들에 의해 알려지자 명치정부는 일본에 속해 있는 유구인들이 살해당했다며 발 빠르게 대만에 대한 징계를 청에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청은 '대만은 청국의 政畝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는 애매한 답을 내놓았을 뿐이다. 만약 이 때 청이 유구는 청의 책봉국이므로 일본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버텼다면 유구의 앞날은 새롭게 전개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찌됐던 명치정부는 1874년 일부의 반대가 있었지만, 대만으로 3천 6백여 명의 군대를 보내어 원주민들을 진압하였다²⁰⁾. 이 사건을 계기로 청과의 교섭에서 유구의 일본귀속과 관련하여 일본은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고 유구처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명치정부의 유구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은 유구를 처분하여 일본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1875년 유구에 대해 청과의 책봉관계의 청산 및 진공의 금지, 藩政을 다른 府縣에 준하여 새롭게 할

15) 高良倉吉, 1993, 『琉球王國』, 岩波新書, 74.

16) '진토제(じんとうぜい)'라고도 읽는다. 1637년부터 '지와리제(地割稅)'와 더불어 15세에서 50세에 이르는 남녀를 대상으로 부과된 세금으로 유구처분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한참 지난 1903년에 폐지되기까지 266년간에 걸쳐 부과된 가혹한 세금.

17) 최인택, 2002, "일본과 오키나와-중앙과 변경의 논리" 『일본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책사랑, 172-173.

18) 宮城榮昌, 1968, 『沖繩の歴史』, NHKブックス80, 日本放送出版協會, 150.

19) 新川明, 1981, 『琉球處分以後(上)』, 朝日選書175, 朝日新聞社, 3.

20) 이 사건으로 인한 대만출병은 근대국가 일본의 첫 해외파병이라는 의미도 있었다(新崎盛輝, 2001, 리플릿66 『現代日本と沖繩』, 山川出版社, 6.)

것 등을 요구하였으나, 특히 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배층을 중심으로 반대가 심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유구지배층은 1876년 정부에 특사를 파견하여 관계요소에 탄원과 청원을 되풀이하였다. 그러나 명치정부의 태도는 완고하였고 특사의 退京을 명하였음

유구본도는 지금까지 사츠마가 지배한 것처럼 일본이 점하고, 유구본도 이남의 미야코(宮古)제도와 야에야마(八重山)제도는 청에 양보한다는 안이었다.

에도 청원과 탄원운동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정부는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

한편, 1877년 명치유신

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에 의한 대규모의 西南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유구문제는 소강상태를 맞이하게 된다. 이 틈을 타 유구는 북경으로 밀사를 파견하여 청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주일공사로 부임하게 된 何汝璋의 도움으로 미국, 영국, 네덜란드 공사에게도 밀서를 보내 응원을 요청하자 유구의 일본귀속의 문제는 국제적 문제로까지 비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남전쟁을 진압하고 자신감을 되찾은 명치정부는 더 이상 문제가 커지기 전에 서둘러 유구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1879년 3월 경찰관 160명과 약 400명의 군대를 파견하여 전격적으로 유구처분을 단행한다. 이로서 유구는 일단 일본의 새로운 영토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명치정부의 일방적이면서 단호한 유구처분을 통하여 유구문제는 일단락 된 것처럼 보였지만, 청의 개입으로 인해 여전히 외교적 갈등이 남아 있었다. 특히, 유구의 위정자들에게 있어 일본은 사츠마의 식민지적 지배, 명치정부의 강압적인 유구처분 등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壓政을 휘두른 지배자들이었지만, 중국의 청은 자신들의 지배권과 체제를 인정하고 朝貢무역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책봉관계에 있었으므로 유구처분이라는 사태를 맞이하여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기댈 수 있는 존재였다.

따라서 청국에 대해 끊임없는 청원활동을 피하였고, 그 결과 청과 일본 사이에 유구의 귀속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어 양국 간의 교섭이 재개되었다. 하지만 사태는 유구 측의 희망사항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는데, 그 이면에는 유구 측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제 3의 인물이 관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1879년 때마침 중국천진에 들린 미국 전 대통령 그란트²¹⁾에게 李鴻章이 일본의 유구 합병에 대한 조정을 부탁한 것이 화근이었다. 물론 당시의 긴박했던 동아시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감안한다면 크게 무리한 부탁은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시 유구 측의 정치외교적인 역량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청의 유구에 대한 정치, 외교적 가치인식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사건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으로 건너 온 그란트는 당시 막부의 실세로서 內務卿을 맡고 있던 이토 히로부미(伊

藤博文)와 수차례 접촉하고 명치천황을 만나 유구의 귀속문제로 인하여 양국이 전쟁이라도 하게 되면 상호간에 큰 상처만 입을 수 있으니 실리를 취하여 유구를 二分하지는 ‘分島案’을 제시한다. 즉, 유구본도는 지금까지 사츠마가 지배한 것처럼 일본이 점하고, 유구본도 이남의 미야코(宮古)제도와 야에야마(八重山)제도는 청에 양보한다는 안이었다²²⁾. 이에 일본 측은 1880년 북경에서 교섭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전에 청과 맺고 있던 청일수호조약을 개정하여 다른 구미제국과 동일한 최혜국대우를 조건으로 분도안교섭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청은 한발 더 나아가 유구열도의 북부지역인 아미미제도(奄美諸島)는 일본이, 유구본도 및 그 주변도서는 유구왕국으로 존속시키고, 남부의 미야코 및 야에야마제도는 청에 속하게 한다는 ‘琉球三分案’으로 맞받아치며 결국 교섭은 난항을 겪게 된다²³⁾.

그런데 이 때 청이 러시아와의 외교 분쟁에 휘말리게 되자 이 틈을 이용하여 일본의 주장대로 미야코, 야에야마를 청나라에 넘기고 그 대신 청일통상조약을 개정하여 1881년 1월부터 발효하기로 타협을 하게 된다. 그러나 조인만 남겨 둔 상황에서 청나라 정부 내부의 반대와 한반도를 둘러싸고 청, 러, 일간에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이 문제는 호지부지되고 결국 유구는 일본귀속으로 결론 나게 된다.

커다란 범주에서 볼 때 비록 일본과 청에 兩屬된 애매한 위치에 있던 유구였지만, 왕조체제를 유지하며 언젠가는 독립을 되찾아 비록 소국가로서이긴 하지만, 독립국가로서 자주적인 주권회복의 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적어도 일본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빼앗겨 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종주국인 청나라의 도움에 기대는 수밖에 없었지만, 청일수호조약 체결 당시 청의 국내적 상황은 차치하고라도 서구열강은 물론 일본조차도 유구에 대한 가치를 의미 있게 평가하여 전략, 전술적 가치 위에서 서서 교섭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의구심이 남는다.

그 보다는 각각 자국의 이해득실에 따라 주고받을 수 있는 카드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그 카드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적으로 유구인들의 의견과 전혀 상관없이 흥정의 대상으로서만 유구를 바라보았다는 점이다. 특히 청의 경우 대일교섭에 있어 유구의 分島案을 놓고 일본 측과 흥정을 벌였으며, 일본 역시 같은 지평에서 ‘최혜국대우’라는 조건을 걸어 자국의 유, 불리라는 잣대로서만 유구를 바라보았던 것이다.

4. 유구처분 이후의 舊慣溫存정책

유구처분을 계기로 오키나와현이 설치되었지만, 구지배층을 중심으로 불복종과 저항의

22) 宮城榮昌, 1968, 『沖繩の歴史』NHKブックス80, 日本放送出版協會, 165-167.

23) 이 삼분안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이문이 있는 것 같다(新川明, 1981, 『琉球處分以後(上)』朝日選書175, 朝日新聞社, 59). 하지만 유구 측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국이억우선주의라는 틀에서만 유구의 귀속 문제가 논의되었다는 점에서는 변함없다.

21) 미국 제18대 대통령(U.S. Grant, 1869-1877)

에너지는 여전히 분출되고 있었다. 특히 왕족, 사족, 중앙 및 지방관료 등 지배계층에 있던 자들은 왕조체제아래에서 누렸던 정치, 경제, 사회적 특권을 박탈당한다는 위기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항의 중심세력이었다. 이러한 저항과 불복종 운동이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된 점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수 백 년 간 이어져 온 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질서에 익숙할 수 없었던 일반 민중으로부터의 저항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미야코지마(宮古島)에서 일어났던 '산시이(サンシイ)사건²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마을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불복종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불복종운동을 부추긴 것은 지배층이었지만, 오키나와 본도의 중심부로부터 멀리 떨어진 촌락사회에서조차도 이러한 운동이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즉, 구지배층들의 특권적 지위 보전을 위한 '保身'만을 위한 불복종 운동이었다면 그 운동은 고립될 수밖에 없었겠지만, 사츠마의 수 백 년에 이르는 '歴政'에 대한 유구인들의 '반일감정'이 그 기반에 있었기에 광범위한 불복종 운동이 전개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²⁵⁾.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현정을 구현하기 위해 각지에 파견되었던 일본본토에서 온 경찰이나 관료들은 상당히 강압적으로 오키나와 사람들의 복종을 요구하면서 각지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²⁶⁾. 즉, 유구라는 나라가 해체되어 지금껏 타자로서 인식되어 왔던 야마토(大和: 오키나와사람들이 대상화 한 타자로서의 일본본토)로 편입되어 명치정부의 지시, 지도를 직접적으로 받게 되자 오랜 타성에 젖어 있던 일반 민중들 또한 당황스러웠고, 그 시정이 강압적이었기 때문이다²⁷⁾.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현정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백성들 위에 군림했던 구지배층들을 행정라인의 전면에 배치할 수밖에 없었고, 현정이 실시된 초기에 새로운 제도라는 '옷'을 입은 자들 역시나 구지배층과 관련된 자들이 대부분 이었다²⁸⁾. 결국 구지배층의 매개나 협력 없이는 흡수통합 정책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을 이미 가지고 있던 명치정부는 새로운 일본영토 오키나와에서도 여전히 커다란 영향력을 지니고 있던 구지배층을 끌어안는 회유책을 구사한다는 예견된 수순을 밟게 된다.

특히 지배층 중에서도 왕족, 고급관료 층 등 특권적인 지위에 있던 부류들은 유구처분에 대한 중심적인 저항세력이었으므로 명치정부는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 막대한 일시금을 지급한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舊慣溫存정책을 펼쳐 구지배층과 백성들이 협착하여 대대적인 저항으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과상적인 공세를 취하였음은 물론이다. 구지배층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고 각 지방에 있는 말단행정을 담당했던 하급관리들도 안고 가게 된다면, 일본정부에 비협조, 불복종운동의 여파도 잠재울 수 있는 이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러한 구관온존정책은 일본이 유구처분에 즈음하여 청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게 되자, 일본정부는 "유구왕조의 苛斂誅求에 시달리는 유구인민들을 해방시키고" 유구와 일본은 원래 "同種", "同祖"이기 때문에 다시 합칠 뿐이라고 내세웠던 논리를 간단히 뒤엎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오키나와 민중들은 여전히 피폐했으며 일본본토로부터 들어 온 상업자본 등에 의해 더 더욱 어려운 삶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유구왕국, 유구번으로부터 일본의 새로운 縣의 하나가 되어버린 신생 오키나와를 일본화하기 위한 구관온존정책은 당분간 유지되었다.

결과적으로 구관온존정책으로 인해 오키나와의 근대화는 대폭 늦어졌고, 유구근대화를 명분의 하나로 단행한 강압적인 유구처분 때의 정책과는 180도 전환된²⁹⁾ 정책이 추진되는 등 그때그때 일본 측의 '형편'에 따른 태도 바꾸기는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따라서 일본의 새로운 영토 오키나와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반 분야에서 현격한 격차와 차별아래 놓이게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단일민족국가 일본'이라는 급조된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오키나와 사람들을 '忠良한 천황의 臣民'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교육기관의 설치와 재판, 경찰, 감옥이라는 권력 장치의 강화만은 지체 없이 시행되었다. 일본으로의 '同化'와 '皇民化' 교육은 오키나와인들의 정체성과 오랜 기간을 통하여 축적되어 온 그들의 '문화적 習俗'에 대한 대대적인 교화활동을 의미하였으며, 교육현장에서는 이로 인한 '문화적 수치심'을 동반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전개되었다. 예를 들어, 소학교에서는 오키나와 사투리를 금지하고 일본어사용을 의무화 하였는데 이를 어길 경우 '호젠후다(方言札)'라고 하는 표찰을 목에 걸고 있어야 하는 수치를 당해야만 하였다.

여기에서 상기되는 것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통치기의 강압적인 황민화 교육과 현상적인 오버랩이다. 조선어사용금지, 창씨개명, 신사참배의 강요 등을 떠올려 본다면, 유구에서 오키나와, 그리고 일본화해 가는 과정과 유사하며 일본은 이미 이를 통하여 식민지 지배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었다고 지적할 수 있겠다³⁰⁾.

24) 일본어의 '산세이(さんせい: 賛成)의 미야코지마식의 사투리. 1879년 7월 미야코의 시모사토촌(下里村)에서 새로 설치된 파출소에 통역 겸 심부름 일을 하던 마을 사람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수사결과 새로운 縣政에 불복종할 것을 맹세한 서약서가 발견되고, 여기에 형서 서명한 마을 사람들이 수 백 명에 이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약서의 주된 내용은, 일본인들에게 절대 협력하지 말 것과 직책을 주어도 절대 받지 말 것. 강압적으로 직책을 맡기면 목숨을 걸고 부역하지 말 것. 이를 어기면 본인은 죽음을 부모처자는 극형에 처한다는 대단히 엄격한 서약서였다. 이러한 서약서가 오키나와 전 지역에 걸쳐 존재했다고 한다(宮城榮昌, 1968, 『沖繩の歴史』NHKブックス80, 日本放送出版協會, 167-169)

25) 新川明, 1981, 『琉球處分以後(上)』朝日選書175, 朝日新聞社, 32.

26) 新川明, 1981, 『琉球處分以後(上)』朝日選書175, 朝日新聞社, 39-43.

27) 三木健1992『八重山近代史の諸相』文藝社, 73-75.

28) 물론 지방행정의 주요 직책은 일본 내지인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29) 新崎盛輝, 2001, 리플릿66『現代日本と沖繩』, 山川出版社, 8.

30) 최인택, 2002, "일본과 오키나와-중앙과 변경의 논리" 『일본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책사랑, 173.

5. 일본의 패전과 미군정 그리고 오키나와의 본토복귀

1945년 일본은 일본의 민주화와 비군사화를 요구하는 포츠담선언을 수락하고 항복을 선언하게 되고 연합국최고사령관총사령부(GHQ SCAP)의 간접통치가 시작되었다. 일본의 패전이 목전에 와 있던 1945년 3월 26일 미군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의 오키나와 상륙작전이 실시되고 약 3개월에 걸친 오키나와전은 미연합군, 일본군은 물론 수만 명의 오키나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6월 22일 일본군사령관 우시지마 미츠루(牛島滿) 중장의 자결로 끝났어야 할 오키나와전은 미군의 포로가 되면 여자는 강간을 당하고 남자들은 사지를 찢는 죽임을 당한다는 일본군들의 공갈과 협박 아래 집단자결이라는 형태로 오키나와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참극이 벌어졌다. 이는 앞서 언급한 ‘忠良한 皇國臣民’ 교육을 바탕으로 한 국가주의와 군국주의에 내몰려 무모한 전쟁에 동원된 오키나와 민간인들이 동굴에서 일본군의 지도 아래 서로의 목숨을 빼앗는 형태로의 참혹한 집단자결이었다. 일본본토 수호의 대가로 치러진 오키나와전은 오키나와인들의 엄청난 희생을 가져왔지만, 그러한 희생의 대가는 오키나와인들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GHQ(연합군군 총사령부)의 일본점령 정책의 기본방침은 민주주의의 정착과 비군사화에 있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우여곡절 끝에 GHQ로부터 주어진 헌법은 이러한 기본방침을 반영한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평화헌법’으로서도 잘 알려져 있다.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쟁이나 무력에 의한 위협,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戰力을 갖지 않으며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일본국헌법³¹⁾이 1946년 11월 3일에 공포되고 1947년 5월 3일 시행되었지만, 오키나와는 평화헌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1946년 1월 29일자 GHQ의 각서에서 “약간의 외곽지역을 정치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일본본토에 대해서는 간접통치를 실시하지만, 오키나와 지역은 미군의 직접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³²⁾. 이는 말 할 것도 없이 미군부의 대 소련 및 대 아시아 전략에 있어서 오키나와를 전략적, 군사적 거점으로 이용하기 위한 포석이었다³³⁾. 미국의 이러한 오키나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은 오키나와 상륙전에 즈음하여 미해군 元帥였던 니미츠(C.W. Nimitz)가 1945년 3월 26일 ‘미해군군정부포고 제1호’를 발표하며 일본과의 전쟁수행의 필요상 남서제도(북위 30도 이남의 오키나와 및 아미미오오시마(奄美大島) 일대)를 군사점령하고 일본정부의

모든 사법, 행정권을 정지하며 軍政府를 설치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³⁴⁾.

오키나와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미군은 오키나와 주둔하면서 수용소를 설치하고, 1945년 8월 15일에는 각 수용지역으로부터 이전에 오키나와 현의원, 중학교교장 등을 역임한 유력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15명을 위원으로 하는 미군정부 자문기관인 오키나와諮詢會를 두는 등 군정이 실시되었다³⁵⁾. 이러한 과정에서 미군정 초기에 전쟁의 참화를 피해 산으로 참호로 피난가 있던 사람들도 점차 수용소에 수용되었고 배급이 실시되었다. 전쟁 직후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서 식량부족에 허덕이던 사람들에게 극히 제한된 양의 식량이 배급되고 그 대가로 미군에게는 노무를 제공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본도의 경우 수용소 이외의 주요지역은 미군의 군용지로 수용되었으며 이를 둘러싸고 오키나와 현지인들과 미군 사이에 첨예한 대립과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오키나와제도에 대한 미군정은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는데, 오키나와 본도와 그 북쪽의 아미미제도에는 오오시마지청(大島支廳), 남쪽의 미야코제도에는 미야코지청(宮古支廳), 야에야마제도에는 야에야마지청(八重山支廳)을 통치기구로 두었다. 1950년 미군정부는 미민정부(米民政府)로 개칭하고 4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던 군도정부를 통합하여 1952년 4월에 이 미민정부 아래에 3권 분립 형식을 취한 유구정부를 설치하게 된다. 유구정부의 행정부의 장인 행정수석은 미민정부에서 임명하였으며,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에 의해 구성된 입법원이 있었지만, 미군에 의한 선거간섭, 미군 측의 명령인 布告나 布令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된 입법 활동이 이루어졌다. 사법부의 민재판소(民裁判所)³⁶⁾에서는 유구주민들 사이의 사건만 취급하였지만, 이도 법령해석상 미군지배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민정부 재판소에 사건을 이송해야 했다.

외국인에 관한 사건 역시도 미민정부재판소의 관할이었고, 미군에 의한 사건은 군법회의에서 다루어졌다³⁷⁾. 즉, 일본본토의 민주주의적 이념실천이라는 정책과는 한참 거리가 먼 무늬만 민주주의적인 제도로 옷 입혀 실제로는 미군정으로부터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이민족지배가 또 다시 시작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오키나와인들은 다양한 차별과 부조리함에 허덕이며, 참혹한 전쟁경험에서 채 벗



31) 일본국헌법 제9조에는 “첫째,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希求하고,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威?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둘째,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육, 해, 공군 그 외의 전력 이것을 보유하지 않는다. 나라의 교전권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해석개헌’을 통해 현재, 최선의 전투 장비를 갖춘 약25만 여명의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다.

32) 新崎盛輝, 2001, 리플릿 66 『現代日本と沖繩』, 山川出版社, 24-25.

33) 中野好夫·新崎盛輝, 1976, 『沖繩戰後史』, 岩波新書, 16.

34) 이미 개항기에 ‘黑船’을 에도정부에 개항을 요구한 미국의 페리제독은 유구제도가 갖는 군사전략적 위치를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었다. 1854년 일본과의 수호조약 체결 후, 같은 해 유구와도 琉米수호조약을 체결한다.

35) 中野好夫·新崎盛輝, 1976, 『沖繩戰後史』, 岩波新書, 18-19.

36) 상소재판소, 순회재판소, 치안재판소가 있었다.

37) 新崎盛輝, 2001, 리플릿 66 『現代日本と沖繩』, 山川出版社, 36-38.

어나기도 전에 군인들로 넘쳐나는 '군사기지 오키나와'를 받아 들여야 했다. 오키나와인들이 일본본토로 가기 위해서는 도항증명서(패스포트)를 발급받아야 했으며, 태어나고 자랐던 오키나와를 떠나 일본본토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오키나와로 되돌아오기 전까지는 일본인으로서 인정된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³⁸⁾.

1950년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맥아더에 의한 GHQ의 일본점령 정책은 지금까지 취해 왔던 일본의 비무력화, 비군사화와는 거리가 먼 역코스를 밟게 되면서 오키나와에 대한 전략적, 군사적 위치는 더 더욱 공고해 진다. 1952년 발효된 대일강화조약³⁹⁾으로 일본은 독립하게 되고 연합군은 일본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맺어진 미일안보조약에 의해 미군은 계속하여 일본에 주둔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군에 의한 오키나와의 군사적지배가 영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대일강화조약이 정식으로 발효되기 전, 언론 등을 통해서 알려졌고, 오키나와의 혁신적인 정당,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1951년경부터 조국복귀운동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했다. 물론 패전 직후 오키나와에서는 미군을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준 해방군으로 인식하고 오키나와의 독립을 오키나와 민족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는 오키나와민족自決論이 새로운 정당들에 의해 제기되고는 있었다⁴⁰⁾.

특히 독립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염두에는, 비록 GHQ로부터 주어진 것이긴 하지만, 일본본토의 평화헌법 아래 자리 잡을 민주주의적인 이념에 근거한 민주적 제도였다. 그러나 오키나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군의 군사적 지배라는 부정적 상황과 대비되는 일본본토의 상황이 필요이상으로 미화되어 과거에 벌어졌던 '역사적 차별지배'는 청산되어 버리고, 패전 후 새롭게 탄생한 평화헌법을 가진 민주국가 일본은 오키나와가 돌아가야 할 조국이 되어버렸다⁴¹⁾. 즉, 오키나와인들 스스로에 의한 조국복귀운동의 주요한 동기는 미국의 군사적 지배였던 것이다. 오키나와 지상전으로 인해 그들이 겪은 참혹한 전쟁체험은 오키나와인들로 하여금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전쟁 없는 '평화'라고 하는 가치를 더 절실한 것으로 만들어 주었다.

한편, 미군의 기지건설이 이 시기에 본격화되자,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보상요구가 거세졌다. 이에 1952년 '군용지임대차계약'을 위한 포고령을 내고 계약을 강행하려고 하였지만, 평당 연간임대료가 '콜라 한 병 값'도 되지 않는 사용료에 격분한 지주들 90% 이상이 계약을 거부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기지건설과정에서 새로이 필요한 토지를 접수하기 위해 1953년 '토지수용령'이 포고되고 이에 저항하는 농민들을 배제하기 위해 '총검

과 불도저'에 의한 강제적인 토지수용이 실시되었다⁴²⁾. 이에 반발한 오키나와인들의 저항운동은 오키나와 전 지역을 아우르는 조직적인 행동으로 이어져 1956년 이후 대규모 민중운동으로 확산되었다. 미민정부는 이러한 오키나와인들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사법, 행정력을 동원하여 탄압하였고 결과적으로는 미군지배를 벗어나기 위한 조국복귀라는 모멘텀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미군의 토지수용과정에서 생성된 민중운동은 이전에 싹 틔운 조국복귀사상에 불을 붙였고, 1960년에는 오키나와현조국복귀협의회가 결성되었다. 오키나와 전역에 걸친 민중운동은 일본본토에서도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음은 물론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다.

오키나와의 이러한 투쟁과 저항운동은 일본의 형편주의와 방관 아래 외로운 길을 걸어왔지만, 이후, 오키나와문제는 일본의 정치적 현안의 주요과제가 되었으며 미일 간에 해결해야 할 외교문제로 부각되었다. 특히, 1965년 미국의 베트남 참전으로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는 오래 전부터 미국이 간파해 왔던 대로, 대 아시아군사전략의 요충지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왔기에 '반전평화운동'의 진원지로서 오키나와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1960년 개정된 미일안보조약에서 재일미군의 배치 또는 장비 등 중요한 변경이나 일본에서의 직접적인 전투행동 등은 일본과 사전협의를 해야 했지만, 오키나와는 협의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따라서 일본본토에 있는 요코스카(横須賀), 이와쿠니(岩國), 사세보(佐世保)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들도 오키나와를 경유하여 베트남으로 출동할 수 있었다. 일본과 미국에게 있어서 오키나와는 미일안보체제를 바깥으로부터 지탱시켜주는 역할⁴³⁾을 훌륭히 수행해 낼 수 있는 '형편' 좋은 땅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전이 진흙탕 싸움으로 전개되면서 베트남반전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결국 1973년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게 되고 베트남정책은 파탄을 맞이하게 되자 오키나와에 대한 군사적지배도 흔들리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베트남전의 戰線기지였던 오키나와에서는 반전, 반기지라는 대중운동이 탄력을 받게 되고 오키나와반환 문제 또한 탄력을 받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한국전쟁을 계기로 한 '한국전 特需'로 경제적 기반을 재정비한 일본은 1960년도 고도경제성장을 맞이하였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미일간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역할분담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미일안보체제아래 일본의 역할은 강화되었다⁴⁴⁾. 이 시점에 오키나와 반환문제가 본격적으로 검토되었고, 무엇보다 자국 영토가 동맹군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은 불명예스러운 일이었다. 1965년 전후 일본수상으로서 처음으로

38) 新崎盛輝, 2001, 리플릿66『現代日本と沖縄』, 山川出版社, 40.

39)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으로도 불린다.

40) 中野好夫·新崎盛輝, 1976, 『沖縄戦後史』, 岩波新書, 27-33.

41) 中野好夫·新崎盛輝, 1976, 『沖縄戦後史』, 岩波新書, 54.

42) 新崎盛輝, 2001, 리플릿66『現代日本と沖縄』, 山川出版社, 46.

43) 新崎盛輝, 2001, 리플릿66『現代日本と沖縄』, 山川出版社, 61.

44) 新崎盛輝, 1996, 『沖縄現代史』, 岩波新書, 17.

오키나와를 방문한 사토(佐藤) 수상은 “오키나와의 조국복귀가 실현되지 않는 한 일본의 전후는 끝나지 않는다”⁴⁵⁾까지 이야기 할 정도였다.

1969년 11월 일본의 사토(佐藤)수상과 미국의 닉슨대통령의 공동성명에서 1972년 오키나와반환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施政權안에 들어오게 된 오키나와는 미일안보조약이 적용되게 되었고 자위대가 오키나와에도 배치된다. 즉,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기지의 방위는 자위대의 임무이고 일본 바깥으로의 전투는 재일미군이 담당한다는 공동작전태세가 만들어졌다. 이는 1960년 개정된 미일안보조약이 오키나와를 분리하여 군사적 지배를 전제로 한 미일안보체제의 강화이었다면, 1972년의 오키나와 반환은 오키나와의 일본통합을 전제로 한 미일안보체제의 강화였다⁴⁶⁾.

1972년 5월15일 오키나와의 일본본토 복귀가 이루어졌다. 당일 일본정부가 주최하는 복귀기념식이 동경에서 열렸는데, 당시의 사토총리가 행한 연설에서 “전쟁으로 인해 잃어버린 영토를 평화리에 외교교섭으로 회복한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며 이것을 가능하게 한 미일우호의 든든한 유대감을 통감한다”⁴⁷⁾고 밝혔다. 한편 복귀의 기쁨이 충분해야 할 오키나와에서의 기념식전에서는 아라(屋良)지사가 “오키나와현민의 이제까지의 요망과 심정에 비취어 복귀의 내용을 보면, 우리들의 간절한 요망이 받아들여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오키나와가 역사적으로 항상 수단으로서 이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배제하고, 현민의 복지확립을 지상의 목표로 하여 평화롭고 보다 풍요로운 그리고 보다 안정된 희망에 불타는 새로운 현 만들기엔 전력을 다할 것을 결의합니다”라는 의미심장한 인사말을 남겼다⁴⁸⁾. 이는 오키나와와 일본 양자 사이에 오키나와를 바라보는 시선의 미묘한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많은 오키나와인들이 스스로가 일본본토로의 복귀를 염원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수이기는 하지만 독립을 원하는 이들도 물론 있었다.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약소국의 서러움을 누구보다도 체감하여 왔던 오키나와인들에게는 비록 차별과 격차, 미군기지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정치, 경제적 대국 일본으로 복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는 전략적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본토복귀 운동을 통하여 기지 없는 섬, 평화의 섬을 갈구해 온 오키나와 민중들의 염원에 반하는 왜곡된 형태로 반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전후, 일본본토의 비무장, 비군사화는 오키나와에 대한 미군의 배타적인 지배와 군사기지화라는 희생위에 성립된 것이다. 따라서 미일안보조약 이후에는 당연히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는 축소 혹은 본토로의 이전이 고려되어야 했지만 오히려 확대 유지되었다. 1972년 일본본토 복귀가 이루어지고 40년이란 지난 21세기 오늘날까지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의 75%가 오키나와 본토에 집중되

어 있다는 사실에서도 오키나와의 희생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오키나와 사람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염원하고 있는 것은 군사기지가 없는 ‘평화의 섬’ 오키나와와 정치, 사회,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격차 없는 ‘본토수준’의 오키나와다.

6. 마무리에 갈음하여

19세기 한반도, 일본열도, 중국대륙, 러시아 등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당시의 국제정세를 생각해 보면 유구의 존재는 과연 무엇이었던가. 그 답은 아마도 유구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따지기 이전에 당시 유구가 점하고 있던 정치, 경제, 외교상의 근본적인 위상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유구는 일본의 실질적인 영향 아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유구의 위정자들 스스로가 적어도 명치유신에 이르러 귀속문제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이라는 당시의 국제적 정세에 둔감한 흔적이 곳곳에 발견된다. 그들은 왕정복고를 전면에 내세운 명치유신, 그리고 폐번치현, 유구처분에 이르기까지 약 10여년에 걸친 일본사회의 전제적인 변화에 거의 무감각하였으며 오로지 지배자인 사츠마와의 관계 안에서만 자신들의 입장을 파악하기에 급급했던 것 같다.

위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명치천황의 親政을 축하하는 유구 측 경하사 일행이 천황으로부터 유구왕을 琉球藩王으로 책봉한 것에 대해, 이전의 사츠마로부터의 책봉이 명치정부의 직속으로 바뀐 정도로 생각하였고 이는 곧 사츠마의 유구침략 이전의 형태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야말로 낭만적이면서도 허황한 희망을 가질 정도로 대내외적 정세에 둔감하였다⁴⁹⁾.

물론 오랜 식민지적 지배체제 아래 유구의 위정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안위와 왕조체제유지에 급급한 나머지,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오지 못한 원죄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사츠마와 왕조로부터 이중의 착취를 당하며 가혹한 각종 조세부담에 허덕이고 있던 백성들로부터 자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위로 떠 버칠 존재로서 사츠마, 명치정부로 이어지는 일본이 있었지만, 그들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지탱시켜 줄 아래에 있는 유구백성들에 대한 인식이 전근대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유구왕조체제 아래 왕조의 지배시스템에 편입되어 있던 각 지역의 지배계층들 역시 공고한 체제유지에 협력하고 순응함으로써 그들의 기득권은 강고하게 유지되었고 역시나 그러한 시스템의 하부에 있었던 유구백성들은 그들의 몫까지 보장하는 봉건적 질서 속에 자리 매김 되어 있었기

45) 新崎盛暉, 2001, 리프렛66『現代日本と沖縄』, 山川出版社, 66.

46) 新崎盛暉, 1996, 『沖縄現代史』, 岩波新書, 18.

47) 新崎盛暉, 1996, 『沖縄現代史』, 岩波新書, 20.

48) 澤田洋太郎, 1996, 『沖縄とアイヌ-日本の民族問題』, 新泉社, 82.

49) 新川明, 1981, 『琉球處分以後(上)』朝日選書175, 朝日新聞社, 3-5. 및 宮城榮昌, 1968, 『沖縄の歴史』NHKブックス80, 日本放送出版協會, 150-151.

때문이다.

이상의 언급은 오키나와인들 스스로에 의한 자화상적인 언설이기도 하지만, 오키나와를 他者化하려는 오키나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언설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본본토 측의 오키나와에 대한 시각은 사츠마체재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본본토국익우선주의'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흥정의 수단으로 삼는 '형편주의'가 변함없이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오키나와 연구자 호카마(外間)는 오키나와의 존재를 '도마뱀의 꼬리(トカゲの尻尾)'⁵⁰⁾로 표현하였지만, 오키나와의 일본과 일본의 오키나와 사이에는 매꾸기 어려운 간극이 존재한다. 즉, 오랫동안 오키나와 지역의 실질적인 지배자였던 일본본토 측의 차별적 시각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고, 복귀 이후, '오키나와진흥개발특별조치법'⁵¹⁾ 등을 통하여 격차(차별)해소에 힘써 왔다고는 하지만, 기지문제에서는 여전히 커다란 과제로 남아 있다.

2009년 8월 중의원 총선거에서 압승하여 단독정권을 수립한 민주당 하토야마(鳩山)총리도 오키나와의 후텐마(普天間)기지 이설문제를 놓고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다 2010년 임기를 채 일 년도 채우지 못하고 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미국일본도의 외교정책은 아시아의 주변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본국내의 오키나와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여전히 미일동맹관계라고 하는 일본본토이익주의를 우선시하는 한 오키나와인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불평등하게 맺어진 재일미군의 지위협정(SOFA)으로 인한 미군들의 범죄가 오키나와에서 끊이지 않고, 이로 인한 오키나와인들의 불만은 최극점에 달해 있다.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특별교부금, 지역발전이라는 '당근'과 기지이전의 부담이라는 '채찍'을 들고 오키나와를 그들의 '형편'에 따라 좌우하고 있다.

유구왕국 그리고 유구번, 폐번치현,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과정을 장편의 역사대하드라마라고 표현한다면 너무 감상적이다. 게다가 이민족지배라는 용어가 오키나와에 대입될 때에는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띤다. 적어도 독립국가로서 유구왕국을 전제로 한다면 사츠마의 지배는 식민지적 지배였고, 전후 미군 군정에 의한 일시적 지배의 경우 명백한 이민족지배가 맞다. 하지만, 유구에서 일본의 새로운 영토 오키나와 현으로의 편입을 사례로 들게 되면, 거기에는 보는 이와 보여 지는 이들 사이에 일정한 역학관계가 존재한다. 즉, 일본본토인들이 보는 오키나와와 오키나와인들이 보는 '야마토(일본)' 사이에 존재하는 어

긋남이 그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본의 일원으로 자리 매김 되어 진 오키나와의 존재의의를 어디에서 찾을까? 우선은 基地없는 '평화의 섬' 그리고 일본본토와의 차별과 격차 없는 '본토수준'의 삶을 통하여 오키나와인들이 겪었던 역사적 고통을 대상화하고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 평화와 연대를 발신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최인택. 2002. "일본과 오키나와-중앙과 변경의 논리". 『일본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책사랑
- 新川明. 1981. 『琉球處分以後(上)』. 朝日選書175. 朝日新聞社
- 新崎盛暉. 1996. 『沖繩現代史』. 岩波新書
- 新崎盛暉. 2001. 리프렛66『現代日本と沖繩』. 山川出版社
- 上原兼善. 1992. "琉球王朝の歴史 - 第一・第二尚氏の成立と展開". 海と列島の文化 第6巻『琉球弧の世界』. 小學館
- 澤田洋太郎. 1996. 『沖繩とアイヌ-日本の民族問題』. 新泉社
- 高良倉吉. 1986. おきなわ文庫『續おきなわ歴史物語』. ひるぎ社
- 高良倉吉. 1993. 『琉球王國』. 岩波新書
- 中野好夫?新崎盛暉. 1976. 『沖繩戦後史』. 岩波新書
- 比嘉實. 1991. 『古琉球の思想』 沖繩タイムズ
- 外間守善. 1986. 『沖繩の歴史と文化』 中公新書799. 中央公論社
- 三木健. 1992. 『八重山近代史の諸相』. 文嶺社
- 宮城榮昌. 1968. 『沖繩の歴史』NHKブックス80. 日本放送出版協會

일본정부 내각부의 오키나와정책관련

- <http://www8.cao.go.jp/okinawa/3/31.html>
- http://www8.cao.go.jp/okinawa/3/pamphlet_02/s1.pdf
- http://www8.cao.go.jp/okinawa/3/pamphlet_02/s2.pdf
- http://www8.cao.go.jp/okinawa/3/pamphlet_02/s3.pdf

50) 外間守善. 1986. 『沖繩の歴史と文化』 中公新書799. 中央公論社, 83.

51) 72년 오키나와 반환에 따라 본토와의 격차해소를 위한 오키나와진흥개발계획에 따라 제정된 특별법. 2002년 이 법이 폐지되고 새롭게 '오키나와진흥특별조치법'이 2011년까지 10년간의 기한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의 개요에서는 '1972년 본토 복귀 이래, 3차에 걸친 오키나와진흥개발계획에 근거한 종합적인 시책추진과 현민의 부단한 노력이 더해져서 시설정비면을 중심으로 본토와의 격차는 점차 축소되었고, 현민생활도 향상하는 등 사회경제는 착실하게 진전하여 왔다. 그러나 전국의 약 7할 수준인 1인당 현민소득이나 높은 실업률(2001년 평균으로 오키나와 8.4%, 전국 5.0%)이 단적으로 나타내듯이 앞으로 오키나와의 보다 나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의 진흥이나 고용의 창출 등 아직도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과제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듯이 '본토수준'의 오키나와를 이루기까지 여전히 갈 길이 멀다.